

# 형 법 ( 5 급 )

(과목코드 : 132)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③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④ 행위 시에는 범죄이던 행위가 재판시법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않게 된 경우이거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에는 신법(재판시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②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도 미수가 성립한다.
  - ③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 후 다른 중간원인들이 개입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는 물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모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며 상당성도 있어야 한다.
  - ② 모두 과잉행위에 대한 취급이 동일하다.
  - ③ 모두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 ④ 모두 사전적 긴급행위이다.
4. 다음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 규정이 위 표시 의무의 세부 내용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비상표제품의 판매행위 당시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 ②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 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것은 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 시행된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한 것은 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은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5. 다음 중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요건이론을 창시한 벨링은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구성요건은 가치판단을 포함할 수 없는 불가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했다.
- ② 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불가치적인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치판단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것을 규범적 구성요건이라고 하고 이에 는 재물의 타인성, 불법영득의사, 음란성, 명예 등이 해당한다.
- ③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적극적 구성요건요소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파악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되게 된다.
- ④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자의 내심적, 정신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의와 과실, 목적, 경향, 불법영득의사 등을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다.

6. 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지만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중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연령확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 ③ 퇴사한 전직 동료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파일 등을 복사해 주었다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퇴사하면서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면,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파일들을 회사의 외부로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 다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은행에 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③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었고,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 ④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어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혈전이 형성되었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8. 다음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범죄론체계에서 취하고 있는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심리적 사실관계인 고의, 과실로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면 책임이 인정된다.
- ② 고의·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지만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가 된다고 한다.
- ③ 목적적 범죄론체계에서의 책임은 고의에서 분리된 위법성의 인식만이 독자적인 책임표지를 이룬다고 한다.
- ④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나아갔다는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을 이룬다고 한다.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의 경합이 있는 경우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미수로 처벌된다.
- ② 두 사람이 서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가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모두 기수로 처벌된다.
- ③ 독립행위의 경합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이상 모두 미수로 처벌된다.
- ④ 독립한 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실화죄로 처벌된다.

10. 다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행위 당시 위험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점을 원인행위시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③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가 성립한다.

11. 예비·음모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행위를 한 후 본죄의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살해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규정 자체는 존재하므로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중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2. 다음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 중 한 개의 죄에 해당하는 부분만 파기환송된 때에 다른 죄가 항소포기로 인하여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미 확정된 죄와 파기환송된 죄는 동시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의 두 개의 죄의 판결에 대하여 일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고 다른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었다면 두 죄는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④ 포괄일죄의 중간에 이종의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포괄일죄는 두 개의 죄로 나누어지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인정된다.

13. 다음 보기의 형의 가중·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ㄱ. 누범가중  
 ㄴ. 정상참작감경  
 ㄷ. 각칙조문에 따른 가중  
 ㄹ. 법률상 감경  
 ㄹ. 경합범 가중  
 ㅂ.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① ㄷ-ㄴ-ㄱ-ㄹ-ㄹ-ㄴ  
 ② ㄴ-ㄷ-ㄹ-ㄱ-ㄴ-ㄹ  
 ③ ㄹ-ㄴ-ㄷ-ㄱ-ㄹ-ㄴ  
 ④ ㄱ-ㄷ-ㄹ-ㄴ-ㄹ-ㄴ

14.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가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甲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乙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에 甲 등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범죄가담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이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범행과 대항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하고 상대방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③ 모해의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위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자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다면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공동정범에 있어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6.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취한 휴대폰으로 통화나 인터넷 접속 등 무단사용한 경우에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거액을 무자원 송금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에 있어서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중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
- ②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③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
- ④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 ② 어린애를 업은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 ③ 피고인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에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앞부분은 살인미수죄가, 뒷부분은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결국 구타행위와 매장행위라는 두 개의 행위에 의한 경우이므로 양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19. 다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 ②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 ③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 법인의 범죄능력 또는 양벌규정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단지 사법(私法)상의 의무주체일 뿐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③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인 피고인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④ 형식적 경영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약사법 위반행위 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자는 형식적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인 자이다.

21. 다음 중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 ① 甲은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의 임용이 1년 후로 미루어진 경우
- ②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한 의사가 있는 경우
- ③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④ 甲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乙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진실한 사실을 공언히 적시한 경우

22.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택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잠귀놓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甲의 부재 중에 甲의 처 乙과 혼외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乙이 열어 준 현관출입문을 통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에는 甲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주거에 거주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주거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④ 타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분만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3.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수범도 기수의 고의를 가져야 한다.
- ②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할 것을 교사한 바, 乙은 丙을 살해하려고 권총으로 쏘았으나 丙이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丙을 병원으로 호송하여 생명을 구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장애미수, 乙은 중지미수이다.
- ③ 예비행위를 중지했을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 ④ 미수범 처벌에서 형의 감경의 대상은 주형에 한하고 부가형이나 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

24. 다음은 간접정범 또는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③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甲의 교사·방조 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乙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乙을 교사·방조한 甲은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25. 다음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에,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